

文 “北 대화 복귀 견인” 요청에 왕이 “건설적 역할 자속”

〈中 외교부장〉

문재인 대통령, 中 왕이 부장 접견

文, 중국의 역할 당부·지지 요청
왕이 “양국, 상호 존중 이어가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접견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대화 중단 사태에 따른 중국의 역할을 당부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 “그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과 기여를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중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왕이 부장에게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주면인사를 하 있다.

/뉴스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한미 양국이 지속적으로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나눴고,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대북 관여 방안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음에도 북한이 아직 호응해 오고 있지 않은 상황과 관련 ‘북한의 대화 복귀 견인’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과 지속적인 협력도 당부했다.

이에 왕이 부장은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 발전을 언제나 지지하는 입장임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

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왕이 부장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날 다시 한국에 방문한 데 대해 “한중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해 주는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더 성숙한 한중관계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할 시점에 방한해 더욱 뜻깊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왕이 부장은 시진핑 주석의 안부를 전하며 “양국 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전이 갖춰지는 대로 시 주석 방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소통해 나가는 한편, 양국이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한중 간 우호와 협력을 지속해 강화해 나갔으면 한다”는 희망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한 성공적인 개최를 당부하며 “베이징올림픽이 평창올림픽에 이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또 한번의 전기가 되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왕이 부장은 “베이징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적극적인 태도로 정치적의지만 있으면 하루에도 역사적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긴밀하게 소통하며 방역 협력, 인적 교류 활성화, 신속통로(양국 기업인에 대한 방역 절차 간소화) 개설,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출범 등 협력 대응 사례를 언급하며 “코로나 상황에도

긴밀히 소통했다”는 말도 전했다.

왕이 부장은 문 대통령 발언에 “문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님과 좋은 신뢰 관계와 우정을 구축하셨다. 두 분 정상의 견인 하에 중한 관계는 건전한 발전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는 양측 간의 교류와 협력을 막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우정을 심화시켰다”고 평가했다.

한편 왕이 부장은 문 대통령에 “상대방이 선택한 발전도를 걷는 것을 지지하고 상호 존중했다. 상대방의 핵심적인,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상호 존중하고, 각자 민족 문화를 존중하고, 국민 정서를 상호 존중하는 전통을 해왔다”며 “앞으로 이런 좋은 전통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협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중한 경제 발전은 고도적인 상호 보완성이 있다. 양국 간 협력은 때와 지역적, 사람 간에 조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박진·장기표·장성민 탈락… 국힘 1차 컷오프

책임당원+국민 여론조사 반영
내달 8일 2차 컷오프서 4명 탈락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흥준표, 황교안(가나다순) 후보가 15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컷오프를 통과했다. 박진, 장기표, 장성민 후보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공직선거법 제 108조 제12항에 의거 지지율 및 순위는 공개하지 않는다.

정홍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선관위)은 이날 국회에서 1차 컷오프 경선에 통과한 8명의 후보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8일 2차 컷오프에서 4명의 후보를 추려낸다.

1차 컷오프는 11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책임당원 여론조사 20%와 전국민 여론조사 80%를 합산해 반영했다. 여론조사 기관 두 곳에서 책임당원 2000명과



15일 정홍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선관위)이 1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컷오프 발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그는 1차 컷오프를 통과한 8명의 후보에도 “자칫 경선에 몰입하다 보면 대의(大義)를 잊어버리고 소의(小義)에 집착하는 현상이 자기도 모르게 생겨날 수 있다. 나라 사정을 각별히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대의를 위해서 소의를 버릴 수 있는 큰 그릇을 보여줘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민에게 희망드리는 경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도 밝혔다.

이어 출처 불명의 여론조사 결과가 유포되는 데 대해 “후보 득표율이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그건 저도 전혀 기억을 못할 정도”라며 “어디 새어나갈 시간도 없고,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사실일 수가 없다”고 부인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내수·수출 車 4대 중 1대 ‘친환경차’

8개월 연속 수출금액 증가

지난달 국내에서 판매되거나 수출된 자동차 4대 중 1대꼴로 친환경차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고부가가치 차량 판매가 증가하며 수출금액은 8개월 연속 두 자릿 수 증가를 기록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심화 속에서도 국내 완성차 업계는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는 등 경쟁사 대비 선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8월 자동차산업은 전년 동기 대비 생산 0.7%, 수출 4.1%, 수출액은 16.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내수 판매는 3.3% 감소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금액은 30억3000만달러로 역대 8월 중 8년 전인 2013년 8월(35억7000만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시현했다.

최근 말레이 등 동남아 지역 코로나 19 확산으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심화되면서 생산 차질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국내 완성차업계는 해외대비 부품 공급망 관리 강화를 통해 생산 차질을 최소화했고, 수출 대수와 수출금액이 모두 증가하며 경쟁사 대비 선전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월~7월까지

주요 OEM 업체 전년대비 생산증감률을 보면 현대·기아차는 -10.9%로 도요타(-3.0%)를 제외한 VW(-24.4%), GM(-24.6%), 르노닛산(-30.0%), 포드(-34.9%)보다 감소폭이 적다.

수출대수는 친환경차 수출이 3만대로 크게 증가(+92.2%)하며 전체 차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친환경차 종류별로 하이브리드 1만3063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4746대, 전기차 1만2433대, 수소차 54대 등이다.

특히 전기차 수출호조세로 친환경차 비중이 자동차 수출에서 역대 월간 최고 비중(23.3%)을 기록했다. 모델별로는 코나가 견조한 호조세를 시현하며 최고 수출을 기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아파트 공사·용역’ 입찰담합 막는다

공정위·국토부, 제도 개선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실적기준 완화 등 선정지침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과거 공사·용역 실적 인정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적격심사시 업무실적 평가 만점 상한을 10건에서 5건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가까운 과거에 공사·용역 실적이 없어도 입찰 참여가 가능해진다. 개선안은 2022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공정위가 지난 수년간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관련 입찰 담합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행 입찰제도 하에 경쟁을 제한하는 구조적 원인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논의가 진행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